

대통령 2선 후퇴 가시화... '책임총리' 합법 여부 관건

헌법상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
권력 이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우원식 의장 "명백한 위헌 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탄핵안) 투표 불성립으로 직무정지는 모면했지만,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해졌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했다.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하며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헌법 상에서 책임총리가 가능한지 여부다.

한동훈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덕수 총리와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며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한덕수 총리 공동 담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우 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뉴스시스

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 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대통령 탄핵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에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은 헌법 제 86조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내용 뿐이다.

여기에 '책임총리제'와 관련한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 즉 헌법에 규정되

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군통수권, 공무원 임명권, 외교권 등이 총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직무대행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헌법상 최종 결정권은 윤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발표는 정치권의 반발을 사,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상

불가능하다"면서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 최고위원은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상태로 끌고가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본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제 하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현행 체제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소추안 통과 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한덕수 총리 국무위원 간담회 주제 "국정 공백 없도록 혼신의 노력"

비공개 진행... 오세훈 시장 등 참석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삶 지켜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정에 공백이 발생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당초 임시 국무회의로 정했다가 시작 40분 전에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하고 비공개로 했다.

총리실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아닌 현 상황에 대한 수습 방안을 관련 국무위원 간 논의한다는 점에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의 경우 총리의 모두발언이 공개되지만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한 총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신 총리실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총리의 주요 발언과 회의 논의 내용들을 전했다.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한 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며 "전 내각은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이

'국군통수권, 외교·안보, 인사권을 총리가 맡을 수 있다고 보느냐', '책임총리제 가능하다고 보느냐', '대통령 당부 있었느냐' 등의 질문을 했으나 답을 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국무위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모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안부 차관이 대참했다.

약 40분간의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은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대행 위헌성 지적에 대한 입장', '대통령 당부 메시지가 있었는지', '간담회에서 책임총리제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으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입을 굳게 닫았다.

한 관계자는 "상황을 공유하고, 국정수행에 대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각 부처에서 해야 할 일을 잘 챙기자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책임총리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여기에서 나올 건 아니고"라고 답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위헌·위법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국정대행 구상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직무대행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뉴스시스

노사상생 선도하는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 전문기관, 노사발전재단의 문을 두드리보십시오.

근로자와 기업을 잇는 협력의 나침반

노사발전재단이 2025년에도 노사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6,8,10층), 02-6021-1000